

정규직의 사각지대

정 성 미*

I. 문제 제기

외환위기 이후 유연화의 확산으로 인해 고용의 안정성과 안전성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가 대거 등장하면서 이들에 관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을 논함에 있어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등 정규직과 차별이 있음에는 학계·노동계·정부의 의견이 상이하지 않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의를 내리는 다양한 시각의 차이로 규모의 문제에 직면하면 그 의견이 매우 분분해진다.

비정규직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정규직과 구분된다. 첫째는 고용형태이다. 즉 정규직이 풀타임, 상용, 직접고용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파트타임, 임시고용, 간접고용의 형태를 취한다. 둘째는 고용지위이다.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복지 및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으로 관리되고 대우되는 노동자 집단이다(정이환, 2003).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반복적인 실업과 근로빈곤 위험에 놓인 취약근로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논의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취약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smjung@kli.re.kr).

II. 고용유형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문제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다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별위원회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하고 이 분류 중 하나에라도 속하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¹⁾ 그리고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규직이라고 정의한다.

노사정 합의에 의한 비정규직의 정의 및 규모가 정해지기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의 상용·임사·일용직 중 임사·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파악했었다.²⁾ 현실적으로 고용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서 통계청의 조사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고용계약 기간과 더불어 수당이나 퇴직금 수혜 여부 등에 의해 상용·임사·일용이 구분되고 있다. 즉, 고용 기간만이 아니라 여러 근로조건을 고려한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규직은 고용이 안정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임금과 교육훈련, 그리고 기업복지를 제공받는다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합의에서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인 정규직이 통계청의 종사상지위 분류를 따르게 되면 임사·일용직이 되어 정규직이지만 근로조건과 사회적 및 기업 내 고용지위에서 차별을 받고, 사회

1)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① 한시적 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② 시간제 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③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방식) : 파견·용역·특수 고용·가내·호출근로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에 따르면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초과)인 정규직원을 말하며 고용계약 기간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①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② 회사의 소정 채용 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 단,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한다. ③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 단, 몇 년을 동일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이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에는 여기에 분류해서는 안 된다.

임시직은 일정 사업 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사업 완료가 1년 미만),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 비수혜자를 말한다. 일용직은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자,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을 급여로 받는 자,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생기는 것이다. 2006년 노동부의 공식적인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5.5%(5,457천 명), 정규직은 64.5%(9,895천 명)이다(표 1 참조). 그러나 정규직이지만 임시·일용직에 속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21.2%(3,255천 명)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비정규직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노사정위원회 기준인 정규직/비정규직과 통계청의 상용/임시·일용을 함께 구분해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가 없는 관계로 정규직이며 상용적인 경우는 정규상용직으로, 정규직이며 임시·일용적인 경우는 정규임시·일용직이라 한다.

<표 1>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고용형태별 분류

(단위 : 천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상용직	6,639(43.3)	1,603(10.4)	8,243(53.7)
임시·일용직	3,255(21.2)	3,853(25.1)	7,108(46.3)
임시직	2,926(19.1)	2,092(13.6)	5,018(32.7)
일용직	329(2.1)	1,762(11.5)	2,091(13.6)
전 체	9,895(64.5)	5,457(35.5)	15,351(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6년 8월.

2. 고용유형별 고용현황과 분포

<표 2>는 고용유형별 근로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의 조사 이래 비정규직 규모 및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모두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며 이는 규모가 큰 기간제근로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정규임시직은 2006년 19.1%로 증가했으며 변화를 보이지 않던 정규일용직까지 2.1%로 증가했다. 이는 부가조사가 실시된 이래 정규임시·일용직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간제근로가 증가해 온 추세와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비정규직 규모의 감소만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정규임시·일용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사회보험의 혜택 등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규임시·일용직의 증가

<표 2> 고용유형별 근로자 추이

(단위: 천 명, %)

	임금근로자수				고용유형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전 체	14,149	14,584	14,968	15,351	100.0	100.0	100.0	100.0
정규상용직	6,184	6,088	6,413	6,639	43.7	41.7	42.8	43.3
정규임사일용직	3,359	3,102	3,072	3,255	23.7	21.3	20.5	21.2
정규임시직	3,100	2,844	2,803	2,927	21.9	19.5	18.7	19.1
정규일용직	259	258	269	329	1.8	1.8	1.8	2.1
비정규직	4,606	5,394	5,482	5,457	32.6	37.0	36.6	35.5
한시적근로	3,013	3,597	3,614	3,626	21.3	24.7	24.1	23.6
기간제근로	2,403	2,491	2,728	2,722	17.0	17.1	18.2	17.7
시간제근로	929	1,072	1,044	1,135	6.6	7.3	7.0	7.4
파견근로	98	117	118	131	0.7	0.8	0.8	0.9
용역근로	346	413	431	498	2.4	2.8	2.9	3.2
특수고용	600	711	633	617	4.2	4.9	4.2	4.0
가내근로	166	171	141	175	1.2	1.2	0.9	1.1
호출근로	589	666	718	667	4.2	4.6	4.8	4.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로 인해 전반적인 일자리 질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임금근로자를 정규/비정규직, 상용/임사일용직별, 사업체 규모별로 나누어 본 것이 <표 3>이다. 정규상용직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에 15~25%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규임사일용직의 경우 약 65%의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규임사일용직의 규모가 작아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영세기업, 하청업체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서 더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지위와 근로조건에 상이함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0인 미만 영세업체에 비정규임사일용직 역시 근로자의 약 56%가 분포하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표 3> 2006년 사업체규모별 정규직 고용형태

(단위: 천 명, %)

	전체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정규상용	6,639 (100.0)	380 (5.7)	739 (11.1)	1,388 (20.9)	1,717 (25.9)	1,003 (15.1)	1,413 (21.3)
정규임사일용	3,255 (100.0)	1,268 (38.9)	843 (25.9)	645 (19.8)	316 (9.7)	125 (3.8)	59 (1.8)
비정규상용	1,603 (100.0)	98 (6.1)	167 (10.4)	389 (24.2)	443 (27.6)	250 (15.6)	257 (16.0)
비정규임사일용	3,853 (100.0)	1,339 (34.7)	825 (21.4)	846 (22.0)	550 (14.3)	182 (4.7)	112 (2.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6년 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상용직과 정규임사·일용직을 임금근로자 대비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성별·학력별·산업별·직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를 보면 2006년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은 35.5%이고, 21.2%의 정규임사·일용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64.5%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성별 비중 분포를 보면 정규직의 37.3%만이 여성인 반면, 비정규직은 50.4%가 여성으로 절반 이상 차지함을 나타냈다. 또한 정규직 중 정규상용직은 약 30%만이 여성인 반면, 정규임사·일용직은 52.4%의 비중을 보여, 여성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임사·일용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 고용유형별 성·학력·산업·직종의 근로자 비중

(단위 : %)

		임금근로자	정규근로자	정규상용	정규임사·일용	비정규근로자
전 체		100.0	100.0(64.5)	100.0(43.3)	100.0(21.2)	100.0(35.5)
성별	남자	58.0	62.7	70.1	47.6	49.6
	여자	42.0	37.3	29.9	52.4	50.4
학력별	고졸이하	60.3	54.2	43.1	77.0	71.3
	전문대졸	12.8	14.1	15.5	11.2	10.5
	대졸이상	26.9	31.7	41.4	11.8	18.2
산업별	농림어업	0.8	0.3	0.1	0.5	1.7
	제조업	22.4	27.7	31.1	20.8	12.9
	경공업	7.0	8.1	7.0	10.6	5.0
	전자전기	4.1	5.1	6.3	2.6	2.4
	중화학	11.3	14.5	17.9	7.6	5.4
	전기가스수도	0.4	0.5	0.8	0.1	0.2
	건설업	8.8	5.8	5.2	6.8	14.4
	생산자서비스	16.5	12.4	14.4	8.3	24.0
	유통서비스	18.0	19.6	16.6	25.8	15.2
	개인서비스	14.3	13.4	6.1	28.3	16.0
	사회서비스	18.0	19.6	24.7	9.2	15.3
직종별	의원·고위임시직	1.7	2.2	3.2	0.2	0.8
	전문가	10.6	12.6	16.9	3.8	7.0
	준전문기술공	12.0	13.5	16.2	8.1	9.2
	사무종사자	19.8	23.2	28.7	12.2	13.5
	서비스종사자	10.2	9.4	3.8	20.8	11.6
	판매종사자	7.0	5.4	1.9	12.7	9.9
	농림업숙련종사자	0.3	0.2	0.1	0.3	0.5
	기능원종사자	11.2	10.1	8.1	14.1	13.3
	장치기계조립종사자	11.6	14.4	16.0	11.2	6.5
	단순노무자	15.0	8.5	4.6	16.3	26.9

주 : 1) 생산자서비스업(Producer services)=사업서비스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

2) 유통서비스업(Distributive services)=도·소매업+운송업+통신업

3) 개인서비스업(Personal services)=숙박·음식업+오락·문화사업+가사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4)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s)=공공행정서비스업+보건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사회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6년 8월.

학력별 비중 분포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고졸 이하가 71.3%인 반면, 정규직은 54.2%를 보였다. 또한 정규상용직에서는 고졸 이하가 약 43%의 비중을 보이는 반면 정규임사·일용직에서는 77%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즉, 정규임사·일용직의 경우도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저학력계층이 대거 몰려 있음을 보인다.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정규상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력별 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의 비중(22.4%)이 가장 크며, 서비스업은 15%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은 생산자서비스업(24%)에서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유통·개인·사회서비스업에서는 15%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반면, 서비스업 중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의 경우 정규상용직보다는 정규임사·일용직에서의 규모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가사서비스업 등 소규모 영세사업 등에 정규임사·일용직이 몰려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서비스업의 경우는 정규상용직의 비중이 24.7%나 되는 반면, 정규임사·일용직은 9.2%에 그쳐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정규임사·일용직이 매우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직종별 비중을 보면,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업·숙련종사자 및 단순노무자에서 비정규직이 몰려 있으며, 전문가 및 사무종사자에 정규직의 규모가 큼을 알 수 있다. 산업별 비중 중 유통·개인서비스업에서 정규임사·일용직이 많음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직종별 비중에서도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자에서 정규임사·일용직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유통·개인서비스업 및 서비스종사자의 경우 정규임사·일용직 내에서의 비중이 비정규직 내에서의 비중보다 높아 낮은 질의 고용이 영세 서비스업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2006년 임금근로자 증가에 정규직, 정규상용직, 정규임사·일용직, 비정규직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계층에서 고용 증가를 주도했는가를 분해한 것이다. 2006년 전체 임금근로자는 2005년 대비 2.6% 증가하였고 이것은 정규직에서 2.7% 증가, 비정규직에서 0.2%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때 정규직의 증가에 정규상용직(1.5%)과 정규임사·일용직(1.2%)의 기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정규임사·일용직의 증가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에서 임금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전문대졸의 증가에는 비정규직 증가의 기여가 큰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정규직, 특히 정규상용직 증가의 기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고용 증가와 고용형태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먼저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했고 이는 고용형태별 모두의 감소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을 경공업, 전자·전기, 중화학으로 세분한 경우 경공업과 전자·전기산업은 감소한 반면, 중화학의 경우는 1.7% 증가하였고 이는 정규상용직의 증가(1.3%)에 기인했다. 특히 전자·전기산업은

정규임사·일용직과 비정규직은 증가했지만 정규상용직의 감소가 커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서비스의 고용은 6.3%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비정규직의 증가(5.2%)에서 기인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의 비정규직은 감소했지만 정규직의 증가에 의해 고용은 증가하였다. 이 두 서비스업의 정규직 기여에는 상이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유통서비스업은 정규상용직(2.3%)의 기여가 큰 반면, 개인서비스업은 정규임사·일용직의 기여(3.8%)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서비스업의 숙박·음식업, 가사서비스업 등 영세 서비스업의 확대가 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한다.

정규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한 직종은 전문가, 준전문기술공, 기능원종사자이다. 반면, 사무종사자의 경우 비정규직은 1.3% 증가하였지만 정규직의 감소(-1.4%)로 전체

<표 5> 2006년 고용증가의 기여도

(단위: 천 명, %)

		임금근로자	정규근로자	정규상용	정규임사·일용	비정규근로자
전 체		2.6 (383)	2.7 (409)	1.5 (226)	1.2 (183)	-0.2 (-26)
성별	남자	2.6 (226)	2.9 (256)	1.4 (119)	1.6 (137)	-0.3 (-25)
	여자	2.5 (160)	2.5 (155)	1.7 (105)	0.7 (46)	0.1 (-24)
학력별	고졸이하	0.5 (48)	1.9 (172)	0.4 (38)	1.5 (134)	-1.3 (-123)
	전문대졸	5.5 (103)	2.0 (37)	1.2 (22)	0.8 (15)	3.6 (66)
	대졸이상	5.9 (231)	5.1 (200)	4.3 (167)	0.8 (33)	0.8 (31)
산업별	농림어업	-18.9 (-28)	-4.2 (-6)	-2.7 (-4)	-1.5 (-2)	-14.7 (-22)
	제조업	-2.1 (-76)	-1.4 (-49)	-1.2 (-43)	-0.2 (-7)	-0.7 (-26)
	경공업	-7.6 (-89)	-4.8 (-56)	-2.9 (-34)	-1.9 (-22)	-2.8 (-33)
	전자전기	-2.5 (-16)	-3.2 (-21)	-4.7 (-30)	1.5 (10)	0.7 (5)
	중화학	1.7 (29)	1.6 (27)	1.3 (21)	0.3 (5)	0.1 (2)
	전기가수수도	-7.6 (-5)	-2.2 (-2)	-4.5 (-3)	2.3 (2)	-5.4 (-4)
	건설업	2.0 (27)	6.0 (79)	2.3 (31)	3.6 (48)	-3.9 (-52)
	생산자서비스	6.3 (150)	1.1 (27)	0.6 (16)	0.5 (11)	5.2 (124)
	유통서비스	1.0 (28)	2.9 (79)	2.3 (64)	0.6 (16)	-1.9 (-51)
	개인서비스	3.0 (64)	5.7 (122)	1.9 (41)	3.8 (80)	-2.7 (-58)
사회서비스	6.3 (163)	4.4 (114)	3.2 (83)	1.2 (31)	1.9 (49)	
직종별	의원·고위임시직	0.5 (1)	-1.4 (-4)	-1.2 (-3)	-0.1 (0)	1.8 (5)
	전문가	4.1 (65)	4.4 (69)	4.5 (71)	-0.1 (-2)	-0.3 (-4)
	준전문기술공	9.6 (162)	8.7 (147)	6.8 (114)	1.9 (33)	0.9 (15)
	사무종사자	-0.1 (-3)	-1.4 (-44)	-1.2 (-37)	-0.2 (-7)	1.3 (41)
	서비스종사자	-3.5 (-57)	1.9 (31)	-0.3 (-5)	2.3 (37)	-5.4 (-88)
	판매종사자	2.6 (27)	2.1 (22)	1.3 (13)	0.8 (9)	0.5 (5)
	농림업숙련종사자	-26.8 (-16)	-2.2 (-1)	-7.9 (-5)	5.7 (3)	-24.7 (-15)
	기능원종사자	0.8 (14)	0.8 (13)	0.8 (13)	0.0 (0)	0.1 (1)
	장치기계조립종사자	1.6 (29)	2.2 (39)	0.9 (15)	1.3 (24)	-0.6 (-10)
	단순노무자	3.4 (75)	4.0 (88)	0.7 (15)	3.3 (73)	-0.6 (-13)

주: 1) <표 4>와 같음.

2) ()안은 고용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6년 8월.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종사자의 경우 정규직의 증가(1.9%)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감소(-5.4%)의 기여가 컸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했다. 그러나 서비스종사자에서 증가한 정규직의 경우 정규임사·일용직은 2.3% 증가하였고, 정규상용직은 0.3% 감소하여 서비스업에서의 정규임사·일용직의 고용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단순노무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마이너스 기여에도 불구하고 정규임사·일용직의 3.3% 증가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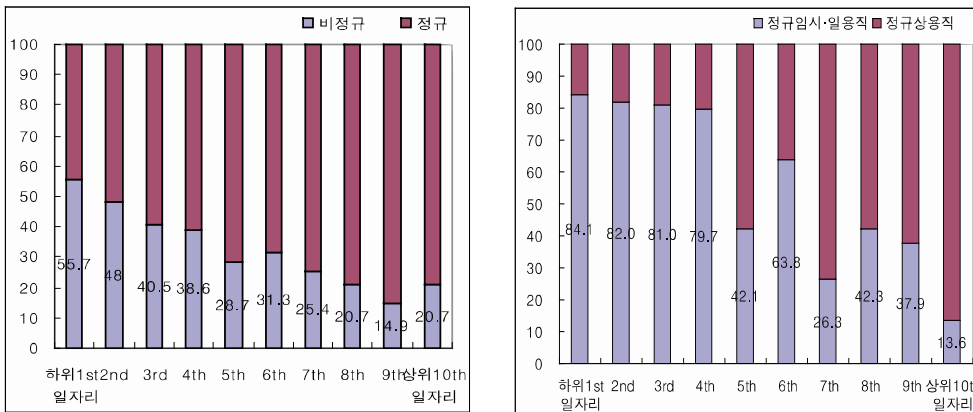
이제 일자리의 질을 10분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자리 10분위비중은 산업과 직종으로 셀을 만들어서 하나의 일자리 단위로 보고 일자리의 질은 각 셀의 임금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개별 셀에 임금지 중위 값을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아 일자리를 서열화한 다음 10분위로 나누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비중과 정규직 내에서 정규상용직/정규임사·일용직 비중을 그래프로 나타냈다(그림 1 참조).

좌측의 그래프는 일자리 10분위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중을 나타낸다. 하위 일자리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데 하위 1분위 일자리의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의 5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분위, 3분위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상위 일자리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중은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상위 10분위의 비정규직 비중은 20.7%를 비롯하여 7분위, 8분위의 비정규직의 비중은 2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측의 그래프는 정규직 중 일자리 10분위별 정규상용직/정규임사·일용직의 비중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보면 정규임사·일용직의 80%를 상회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하

[그림 1] 고용형태별 일자리 10분위별 고용비중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6년 8월.

위 분위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규직 중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들 대부분이 정규임사·일용직으로 분류되어 낮은 질의 일자리에 포진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3. 고용유형별 임금 및 부가급부

2006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9,590원으로 정규직의 임금을 100%로 봤을 때 정규상용직은 112%, 정규임사·일용직은 55.2%, 비정규직은 7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정규임사·일용직은 임금수준은 비정규직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중위임금(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의 2/3 이하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정규상용직은 6.5%로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7 참조). 반면, 정규임사·일용직은 44.4%, 비정규직은 38.3%가 각 고용형태에서 저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보다 정규임사·일용직에서 저임금근로자가 더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정규임사·일용직이 실제로는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취약한 근로빈곤층이지만 통계상으로는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단위 : 원, %)

	2003	2004	2005	2006
정규직	8,059 (100.0)	8,670 (100.0)	9,171 (100.0)	9,590 (100.0)
정규상용직	9,893 (122.7)	10,609 (122.4)	11,209 (122.2)	11,697 (122.0)
정규임사·일용직	4,684 (58.1)	4,865 (56.1)	4,917 (53.6)	5,291 (55.2)
비정규직	5,767 (71.6)	6,377 (73.6)	6,462 (70.5)	6,810 (7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7> 고용형태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정규직	20.5	19.7	19.6	19.0
정규상용직	7.3	7.1	6.9	6.5
정규임사·일용직	44.8	44.4	46.1	44.4
비정규직	42.1	37.5	39.3	38.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8>의 2006년 고용형태별 부가급부 수혜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은 정규상용직의 경우 98%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 근로자 대부분이 사회보험과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는 36~40% 만이 수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임사·일용직의 경우는 비정규직보다도 못한 수혜율을 보이는데 퇴직금의 경우는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된 노동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8> 고용형태별 부가급부 수혜비중

(단위 :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상용직	정규임사·일용직		
국민연금	76.1	98.1	31.3	38.2
건강보험	76.1	98.3	30.6	40.0
고용보험	64.7	82.5	28.4	36.3
퇴직금	68.0	97.9	6.8	30.3
상여금	67.5	95.7	10.1	27.7
시간외수당	53.9	76.9	6.8	21.5
유급휴가	55.0	77.4	9.4	23.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6년 8월.

4. 고용유형별 자발성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의 선택동기를 물어보는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주된 10가지 사유를 선택하도록 하였다(표 9 참조). 고용형태별 취업동기가 자발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정규직의 경우 77.6%, 비정규직의 경우 51.5%이다. 그러나 정규직 중 정규상용직의 경우 약 93%가 자발적인 반면 정규임사·일용직의 경우는 46.6%만이 자발적이라고 응답해 비정규직보다도 낮은 자발성을 보이고 있다.

취업사유별로 살펴보면 당장의 수입 때문에 취업하였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1.6%)보다 정규임사·일용직(35.2%)이 더 높게 나타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규 임사·일용직에 있는 근로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라는 응답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임사·일용직(12.9%)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규임사·일용직의 비자발적 취업이 비정규직보다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경력이나 직장이동 때문에 취업했다는 응답이 비정규직의 5.0%, 정규임사·일용직이 9.1%에 그쳐, 유연한 일자리가 정규상용직으로의 가고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의 질이 낮고, 저임금을 받는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9> 고용형태별 선택 동기

(단위 : %)

		임금근로자	정규근로자	정규상용	정규임사일용	비정규근로자
취업동기	자발	68.3	77.6	92.8	46.6	51.5
	비자발	31.7	22.4	7.2	53.4	48.5
취업사유	만족해서	57.2	68.8	86.3	33.3	36.1
	당장의 수입 때문에	20.4	14.3	4.0	35.2	31.6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7.2	5.9	2.5	12.9	9.4
	경력때문에(가교)	5.7	6.1	4.7	9.1	5.0
	육아가사학업	3.9	1.4	0.2	3.9	8.6
	기타	5.5	3.4	2.3	5.8	9.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6년 8월.


III. 결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의에 따라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6년 약 2만 6,000명이 감소하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8%에서 35.5%로 줄어들었다. 비정규직의 감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증가한 정규직 중 ‘정규직’이란 용어의 의미에서 갖는 고용안정성이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사회보험의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차별받는 소외된 계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분명 정규직이지만, 임시·일용직으로도 분류가 되는, 비정규직보다도 보호받기 힘든 근로빈곤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정규임사·일용직은 주로 영세기업, 하청업체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쉽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인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으며 상당수가 고졸 이하의 저학력이다. 또한 산업별로는 유통·개인서비스업에, 직종별로는 서비스·판매·단순노무자 등에서 종사하며 대부분 일자리의 질이 낮은 하위일zur리에 몰려 있음을 보였다. 또한 임금수준은 비정규직보다도 낮으며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저임금근로 상태에 있으며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등 부가급부 역시 비정규직보다도 못한 수준임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비정규직의 규모와 고용상태, 환경 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06년 11월 30일 이와 관련된 비정규직 보호관련법안³⁾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3) 비정규직 관련법에는 파견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정규임사·일용직은 정규직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진정한 정규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정규직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제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실업과 근로빈곤 위험에 놓인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전병유·김복순(2005), 「노동시장의 약극화와 정책과제」, 『노동리뷰』, 7월호, pp.36~51.
정이환(2003), 「비정규노동의 개념정의 및 규모추정에 대한 하나의 접근」, 『산업노동연구』 9(1), pp.71~105.
통계청(200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 보도자료.